

젠더 측면에서 본 MDGs의 한계와 Post-MDGs 논의 동향*

김양희(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수료)

목차

초록

- I. 들어가며
- II. Post-MDGs 논의 배경
- III. 젠더측면에서 본 MDGs
- IV. 젠더관련 Post-MDGs 개발목표 논의동향
- V. 나가며

초록

국제사회는 오는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종료를 앞두고 2015년 이후를 준비하는 Post-MDGs(Post-2015)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UN작업반과 UN사무총장이 임명한 고위급패널(HLP) 등이 활동하면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설정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Post-MDGs 목표는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와 변동을 감안하고 MDGs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새롭게 설정될 전망이다. 예시적 목표들이 2013년 UN HLP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 있다. MDGs 3번 목표였던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는 UN HLP 보고서가 제시한 글로벌 목표에서는 2번 목표로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주최 Post-2015 논의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를 전면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한 단계 상향조정됐다.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강화 목표는 세부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조혼 근절, 여성에 대한 소유 및 재산권 보장,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MDGs 이후 오히려 더 커진 불평등의 문제가 Post-2015 논의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취향 등에 대한 불평등 해소가 개발목표 달성의 전제조건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목표나 단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 글은 젠더 측면에서 MDGs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젠더와 관련된 Post-MDGs 목표 논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결정될 젠더목표를 가늠해보려는 시론적 글이다.

주제어: 새천년개발목표(MDGs), Post-MDGs, Post-2015, 불평등, 성평등

제I장

제II장

제III장

섹터

제IV장

I. 들어가며

국제사회가 지난 2001년 새천년(New Millennium) 시작을 필두로 오는 201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제 MDGs가 종료되는 2015년을 맞아 MDGs의 목표의식과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지구상에서 극단의 빈곤과 억압을 종식시킨다는 대전제 하에 새로운 목표인 Post-MDGs¹⁾(또는 Post-2015)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MDGs(새천년개발목표)는 오는 2015년까지 극단의 빈곤 종식(MDGs 1),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MDGs 2),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MDGs 3), 아동사망 감소(MDGs 4), 모성사망 감소(MDGs 5), HIV/에이즈·말라리아·결핵 감소(MDGs 6), 환경지속 가능성(MDGs 7), 글로벌 파트너십(MDGs 8) 등 8가지 분야에서 목표 달성을 제시한 바 있다. UN은 매년 MDGs보고서를 발간하여 해당 분야의

1) MDGs가 완료되는 2015년 이후에 대한 논의를 Post-MDGs 또는 Post-2015로 혼용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MDGs 이후를 논의한다는 의미에서 Post-MDGs로 사용하겠다.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한다. MDGs가 설정되고 출범된 지 13년이 지난 현재 아직 극단의 빈곤 종식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으나 아동사망, 모성사망, 에이즈 및 질병 감소 목표는 상당히 달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UN HLP Report, 2012).

MDGs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분분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바탕을 둔 목표들을 설정함으로써 인간개발이라는 인류의 공통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결집으로 인도했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또 기존의 경제개발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개발 중심 패러다임 정착에도 기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이슈를 국제적인 의제로 만들었고, 지구적 차원에서 빈곤 퇴치에 대한 국제적, 정치적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또 보건, 초등교육 같은 MDGs 목표들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집중시켰고 그 결과를 매년 MDGs 보고서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MDGs는 그러나 오는 2015년까지 일부 국가에서 일부 목표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리고 MDGs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경제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했고, 둘째, 선진공여국의 일방적인 사업주도로 수원국을 단순한 수혜자로 만들었을 뿐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셋째, 획일적인 접근(One Size Fits All)으로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넷째, MDGs 목표 제정과정에서 시민사회나 각종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MDGs 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분야들, 예를 들면 분쟁, 거버넌스, 식수 등 분야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Harper et al, 2014; Hill et al, 2013; Treussart&Piemonte, 2014).

이런 맥락 하에서 국제사회는 2012년을 즈음하여 UN을 중심으로 MDGs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글로벌 목표 수립을 지향하며 Post-MDGs를 위한 글로벌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준비에 돌입했다. 당초 2015년까지로 돼 있던 MDGs 목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느냐, 아니면 2015년을 맞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롭게 추진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후자로 가닥을 잡으면서 Post-MDGs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가운데 MDGs 목표 3번이었던 ‘성평등 증진과 여성역량강화’ 목표가 Post-MDGs 논의에서 어떤 맥락에 자리 잡아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은 국제사회가 젠더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성평등 달성을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MDGs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서술하고 Post-MDGs를 준비하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이 가운데에서 젠더분야 논의가 어떻게 구성되고 흘러가고 있는지 소개하려고 한다. Post-MDGs 논의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UN작업반 보고서(2012년 발행)와 UN 고위급패널(HLP)보고서(2013년 발행) 등을 살펴본 뒤, 젠더관련 목표 동향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Post-MDGs에서 젠더분야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공적개발 원조(ODA)의 젠더관련 정책, 예산, 사업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Post-MDGs의 젠더분야 목표 논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결정될 목표를 가늠해보며 제안해보는 시론적 성격의 글임을 밝혀둔다.

II. Post-MDGs 논의 배경

1. Post-MDGs 논의 경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Post-MDGs 목표를 정하기에 앞서 여러 과정을 거쳐 논의를 수렴하고 있다. 먼저 2012년 1월 UN 작업반(UN System Task Team)이 Post-MDGs 논의를 위해 구성되었고, 같은 해 7월 보고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 구현하기”(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 등 3가지 핵심가치와, 포괄적 경제개발과 사회개발, 평화와 안보, 환경 지속가능성 등 4대 핵심 축을 주요 내용으로 Post-2015 UN 개발의제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²⁾.

이어 UN 국가반(UN Country Team)이 국별, 주제별 협의를 진행했는데 UN 개발 그룹(UN Development Group)을 중심으로 88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제별 협의를 진행했다. 이 논의에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언론, 대학 및 연구소 등

2) 임소진(2013),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 패널 보고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10호, 2013년 6월호, 한국국제협력단, p2.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①분쟁 및 취약성, ②교육, ③환경 지속가능성, ④ 거버넌스, ⑤성장 및 고용, ⑥보건, ⑦기아, 식량안보, 영양 안전성, ⑧불평등, ⑨인구(Population Dynamics), ⑩에너지, ⑪물 등 총 11개의 협의대상 주제를 선정했다.³⁾

이어 구성된 UN 고위급패널(UN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이하 HLP)은 정부, 비정부, 지역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HLP 27명을 선정했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이 2012년 6월 이들을 임명했다.⁴⁾ 이들은 2013년 5월 Post-2015 개발의제를 제안하는 종합보고서인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와 경제전환(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을 완성해 같은 해 9월에 UN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 안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갖고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개발 목표를 설정했다. 보고서는 5개 핵심권고사항, 12개의 예시적 개발목표(goals), 54개 세부목표(targets)를 제시하였다.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그룹(Sustainable Development Groups)도 2012년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을 구성했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한다. 이밖에 OECD, 월드뱅크, 일본을 주축으로 한 Post-MDGs Contact Group 등도 Post-2015 논의에서 주도적으로 의제를 구성하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2013년 9월에는 UN 사무총장에게 HLP 보고서가 제출됐고 제68차 UN총회를 계기로 Post-2015 특별회의가 개최됐다. 이어 올해부터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Post-2015 프레임워크 지표가 제안된다. 마지막으로 2015년 제70차

3) 이유진(2013), Post-2015 개관 및 주요 논의 트랙, 2013년 7월호, 한국국제협력단, 미간행, p2.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주제별 논의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www.worldwewant2015.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 의제 선택과 우선순위 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채널도 마련돼 있다.

4) 한국의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도 이 고위급 패널에서 활동했다. 패널들은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며 2013년 9월까지 활동을 마무리했다.

UN총회에서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Post-MDGs(Post-2015)문서가 채택, 확정될 예정이다.

2. MDGs에서 Post-MDGs까지 세계의 변화

MDGs가 경제발전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개발중심의 인간개발과 결과중심 패러다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개념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MDGs 이후 세계는 지구화와 이주, 세계경제위기, 청년실업과 저성장, 국지적 분쟁 등 십여 년 전 MDGs 수립당시와는 다른 환경을 맞고 있다. 지구화는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과 집중은 물론, 보살핌과 섹슈얼리티의 이주⁵⁾ 현상까지 촉발하며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MDGs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커지고 있고 격차의 원인이 성별은 물론, 국가, 계층, 도시와 농촌 등 여러 차원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2년도 MDGs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의 지표인 5세 이하 저체중아동 비율이 남아시아의 경우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격차가 무려 35%나 차이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MDGs 보고서, 2012). 이때 격차는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주를 아우른다.

UN 작업반의 보고서는 지구화로 인한 불평등의 만연을 Post-2015 의제 개발에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제로 꼽고 있다(UN System Task Team, 2012). 보고서는 지구화의 혜택이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고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자원

5) 해외 인신매매의 경우는 뚜렷하게 ‘성적 서비스의 이주’(migration of sexual service)’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이주 패턴을 보면 최빈곤국에서 개도국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재단이 2013년 펴낸 ‘노동이주 동향과 패턴: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Labor Migration Trends and Patterns: Bangladesh, India, and Nepal)’에 따르면 네팔출신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인도, 방글라데시로 이동하고, 인도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그보다 경제력이 높은 국가인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인신매매되고 한국, 중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미국, 유럽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용에 대한 급진적 전환이 없다면 자연자원 부족으로 물적 복지향상 노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한다. 점점 커지는 성별, 국별, 계층별 격차는 불평등을 야기하고, 지속되는 불평등과 희소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분쟁, 기아, 취약함과 폭력을 유발하므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개발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 보고서가 밝힌 세계적인 문제들은 첫째, 불평등의 지속, 둘째, 국가 간 또는 국내 간 지식 격차, 셋째, 인구역동, 넷째, 생태발자국 증가(growing environmental footprint), 다섯째, 평화와 안보, 여섯째, 거버넌스와 책임성 결여 등이며 이 문제들이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국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은 UN 작업반 보고서뿐만 아니라 UN HLP 보고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UN HLP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지 않는 한 Post-2015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HLP 보고서는 빈곤 감소, 아동사망률 감소 등에 끼친 MDGs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 새로운 목표를 수립해 가되, ‘극단의 빈곤을 종식시킨다.’는 MDGs 1번 목표가 여전히 핵심이 되어야한다고 본다 (UN HLP Report, 2013). 이 보고서는 MDGs가 극빈층과 주변집단에 대해 무관심했고, 무력갈등과 폭력에 침묵했으며, 좋은 거버넌스와 법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의 중요성, 언론의 자유와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하지 못한 점,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한 패턴을 촉진하고 널리 알리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MDGs 수립이후 또 하나의 세계적인 변화는 2007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세계적인 불황과 경기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간개발에 중점을 두었던 MDGs의 목표가 다시 경제성장으로 회귀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세계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장기경기 침체 및 불황은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청년실업문제를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HLP 보고서는 불평등을 유발하는 차별의 카테고리에 성, 연

령, 인종, 종족, 종교, 성적 취향, 장애 등을 꼽았으며 연령차별 논의의 중심을 고령자가 아닌 청년에 두었다. 이는 청년실업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HLP 보고서가 제시한 목표들 가운데 8번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공평한 성장’ 목표의 세부 목표가 ‘교육, 취업,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비율 감소’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HLP 보고서, 2013:30-31).

MDGs 이후 세계적으로 벌어진 국지전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남아시아, DR콩고, 시에라리온 등을 비롯한 아프리카지역과 같이 분쟁에 취약한 국가군을 만들어냈다. 당연히 분쟁과 무력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이다. 국제사회는 분쟁과 무력갈등과 그로 인한 피해 및 복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와 같은 세계 환경의 변화와 시민사회, 학계, 정부기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HLP 보고서는 Post-MDGs의 의제선정을 위해 5대 핵심권고사항⁶⁾, 12개 목표(goals)와 54개 세부목표(target)를 선정했다.⁷⁾ 이 보고서는 인간개발에만 주력한 나머지 경제성장의 가치를 간과했다는 MDGs의 비판을 의식한 듯, 포용적 경제성장과 인간개발을 동시에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은 보고서 작성에 앞서 온라인 토론(e-discussion)통해 시민사회기구, 민간기업, 학계, 비정부기구, 의회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웹사이트(www.worldwewant2015.org)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고서 작성에 참고했으며 불평등, 거버넌스, 성장과 고용, 보건, 교육, 환경 지속가능성, 식량안보와 영양, 갈등과 취약성, 인구 역동, 에너지, 식수 등 11개 카테고리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종합했다.

6) HLP 보고서의 5개 핵심권고사항은 첫째, 절대빈곤 종식,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점화, 셋째, 일자리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변혁적인 경제, 넷째, 평화구축 및 효과적이고 공개적이며 책임 있는 공공제도, 다섯째,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7) UN HLP 보고서가 제시한 글로벌 목표와 세부목표는 부록을 참조할 것.

III. 젠더측면에서 본 MDGs

1. 젠더측면에서 본 MDGs의 성과와 한계

MDGs가 달성한 여러 가지 긍정적 성과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2012년과 2013년 MDGs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인구가 지난 1990년 47%에서 2008년 현재 22%로 줄어 극빈 인구수가 20억 명에서 14억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MDGs 보고서, 2013). ‘빈곤의 여성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 빈곤인구의 8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진전은 곧 여성의 현실이 개선된 징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안전한 식수 접근율도 지난 1990년 76%에서 2010년 현재 89%로 상승했다. 식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여아들이 전담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식수사업 개발과 안전한 식수 접근율 상승은 여성/여아에게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MDGs 2번 목표인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도 여아와 남아의 초등학교 입학률이 1999년 91%에서 2010년 현재 97%로 상승해 목표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MDGs 보고서, 2012; 2013). 세계 문맹인구의 상당수가 여성/여아인 현실에서 초등교육 달성은 여아들에게 큰 혜택이 된다. 이밖에 5세 이하 아동사망률, 모성사망률 목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반면에 젠더측면에서 봤을 때 MDGs의 한계도 상당히 많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MDGs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을 목표에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Thomson, 2012; Unterhalter&Dorward, 2013).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실상 세계적으로 가장 만연돼있는 일상적인 폭력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전쟁무기로서의 강간, 성기훼손, 명예범죄, 강제결혼 등 해당사회의 종교, 문화, 관습과 전통, 사회구조와 결합한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은 여성들을 억압하고 개발에 전면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폭력으로 간주돼 무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큰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는 것과 달리, 일부 개도국의 가해 남성들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성폭력을 ‘재미 보기’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김양희, 2013:16). 지난해

발표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성폭력의 이유에 대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재미로’, ‘여성에 대한 처벌’, ‘술 때문에’ 등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이유로 자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Jewkes et al, 2013).⁸⁾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WHO, 2004; 2005; 2013).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조건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MDGs 목표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적은 여성의 성 건강과 재생산권을 목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모성과 관련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Hill et al, 2013; Treussart&Piemonte, 2014; Sen, 2013). MDGs는 모성사망률과 아동사망률 감소에만 집중했을 뿐 여성 ‘섹슈얼리티’의 중요성은 간과해 피임, 가족계획, 안전한 낙태 같은 여성의 성 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문제를 도외시켰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5년과 2011년을 비교 조사한 결과, 모자보건과 아동사망 감소에는 큰 효과가 있었지만 안전한 피임 같은 성 건강 분야는 여전히 인식도도 낮고 대대적인 사업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⁹⁾ 안전한 출산, 산모 및 영아사망 감소 관련 분야에는 투자가 집중되었지만 피임, 안전한 낙태, 성병예방 같은 성건강과 재생산권 분야에는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성건강과 관련된 많은 ODA가 모자보건사업을 위

8) Jewkes, Rachel, et al.(2013), “Prevalence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non-partner rape perpetration: findings from the UN Multi-country Cross-sectional Study on Men and Violence in Asia and the Pacific,” *Lancet*, September 10, 2013, e1-e11. 이 연구는 Rachel Jewkes 박사를 필두로 한 연구팀이 남성과 폭력에 관한 UN 다국가 다부문연구의 일환으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방글라데시,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에서 18-49세 사이 남성 10,178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다. 인터뷰 결과 성폭력 이유에 대해 ‘성적 욕구를 채울 권리가 있다(sexual entitlement)’는 응답이 73.3%, ‘재미(seeking of entertainment)’가 58.7%, ‘처벌(punishment)’이었다는 응답이 37.9%, ‘술 때문’이었다는 응답이 27.0%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지역 남성들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고려와 범죄라는 인식 없이 성폭력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증거다. 그러나 이중 성폭력으로 인해 기소됐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는 1933명 가운데 443명(2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 Hill, Peter S, Dale Huntington, Rebecca Dodd et al. (2013), "From MDGs goals to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an Evolving Aid Environment," *Reproductive Health Matters*, 21(42): 113-124

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산전산후 진단과 안전한 출산 및 산후출혈 예방과 같은 ‘임신, 출산’관련 부분에 집중돼 있을 뿐 성교육, 성병 예방, 안전한 피임과 낙태 등 ‘성건강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지원과 교육, 훈련은 흔치 않다. 한마디로 ‘어떻게 안전하게 임신하고 출산하며 인구수를 조절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돼있을 뿐 여성의 재생산권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지원이 결여돼있다.

세 번째 지적은 성평등 목표와 다른 목표들 간의 연결성 부족으로 탈구(disarticulation) 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목표가 파편화돼 젠더적 측면이 비가시화된 점을 들 수 있다. MDGs 목표들의 탈구 현상으로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았고 MDG 목표나 타깃이 자의적이며 분야별 이해에만 집중됐다 (Unterhalter & Dorward, 2013). 즉, 교육이면 초등교육 달성, 빈곤이면 빈곤을 감소, 모성사망이면 모성사망률 감소 등 특정 세부목표에만 집중하다보니 젠더와 관련된 총체적인 환경을 간과했다. 해당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목표들이 서로 파편화되고 분절된 탓에 종합적이고 일관된 발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젠더와 관련된 부분이 무시, 생략, 누락됐다.

젠더적 측면이 교육, 보건, 빈곤, 모성사망률 감소 같은 목표에 가려져 비가시화돼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일례로 교육 목표에는 ‘읽고 쓸 줄 아는 아동의 수’, ‘입학률’, ‘졸업률’같은 지표는 있지만 학생 대상 성교육, 안전한 학교환경 같은 지표는 없는 경우가 많아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폭력, 불안정한 환경 등으로 인해 소녀들의 학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여학생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들이 교육 목표에서 비가시화됨으로써 이 부분이 삭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지적은 여성을 정책의 대상(objects), 수혜자(beneficiary)로 설정했을 뿐 여성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여성은 정책과 사업의 수혜대상이자 참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MDGs 목표가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식으로 수행된 까닭에 ‘아래에서 위로(Bottom-up)’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고 관료적 지원과 현장의 필요 간에 마찰과 간극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MDGs 개발목표가 성별 권력관계와 불평등이라는 중심문제에 허약하게 대처해 성별구조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못했음을 들 수 있다. 여성들이 처한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억압은 실상 성별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MDGs는 그러나 표면적이고 피상적이며 현실적인 장애에 집중한 까닭에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물론, 빈곤, 재산 및 소유권, 정치참여, 성건강과 재생산권 문제들의 바탕에는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놓여있다. “빈곤과 불평등의 뿌리는 권력관계에 있는 것이지, 보건, 기아, 교육 같은 구체적인 이슈에 있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집단(여성, 여아)에게서 나타난다.”(Sen, 2013: 46)는 지적은 그래서 합당하다.

문제적인 것은 성별 권력관계의 하층부에 위치한 집단들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에 기반을 둔 위험이 조직적으로 나타나 상호 영향을 미치고 강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한 예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카스트도 낮고, 남편도 없는 네팔의 여성 한 부모는 ‘주인 없는 여자’로 치부돼 성폭력과 성추행의 위험이 대단히 높을 뿐 아니라 무시와 천대로 인해 먹고살 길이 막막해져 최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게 시간문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과부’의 삶은 성별 권력관계의 최하층에 위치한 집단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이다.

IV. 젠더관련 Post-MDGs 개발목표 논의동향

1. 불평등과 여성

Post-MDGs 논의의 큰 줄기는 한결같이 불평등 해소를 주문하고 있다. 불평등 문제가 특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불평등에 처한 주요 계층인 2등 시민에 여성/여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젠더 문제이기도 하다.

UN HLP 보고서는 젠더뿐 아니라, 보건,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불평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로 제시했다. 물론, MDGs가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경제성장을 도외시켰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제개발과 인간개발을 동

제I장

제II장

제III장

섹터

제IV장

시에 추구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밖에 MDGs에서 볼 수 없었던 식량안보와 영양,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거버넌스, 평화와 안보, 등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또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s)로 평화, 불평등, 기후변화, 도시(Cities), 청년(Young People), 여성과 여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을 꼽았다. 이중 도시의 경우, 도시화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즉 빈곤, 슬럼화, 폐기물관리, 서비스 전달, 자원사용 등이 범분야 이슈로 제안됐다. 또 선진국의 높은 청년실업을 고려한 듯 청년을 범분야 이슈로 선정하면서 청년층의 생애최초 일자리 갖기에 관해 구체적인 지표와 목표 설정도 제안했다 (HLP 보고서, 2013).

이 보고서는 상당부분을 할애해 여러 가지 차원의 격차와 불평등이 개발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는 도전과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불평등을 거론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평등이 중첩되고 교차된 ‘교차적 불평등’(Intersecting Inequalities) 개념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교차적 불평등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여러 요소가 중첩돼 주변화된 사람들을 더욱더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예를 들면, 무학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빈곤한 흑인 여성의 경우, 성별, 인종, 학력, 장애 여부가 겹쳐진 중층적인 억압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첩되고 교차적인 불평등에 처한 사람은 개인의 힘만으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번 HLP 보고서는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 주목하면서 불평등의 양상을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정치적 불평등 등 총 네 가지로 구분해 논의했다.

이어 Post-2015 의제개발을 위해 출범한 글로벌 테마별 협의에서도 불평등 카테고리 따로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worldwewant2015.org)에서는 아예 성별, 종족, 인종, 학력, 연령, 종교, 장애, 성적 취향 등 여러 가지 차별의 범주를 불평등 카테고리로 묶었다. 이 사이트에서 제기된 여러 논의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로 작성된 “불평등에 대처하기: 글로벌 공적 협의에 관한 종합보고서(Addressing Inequalities: Synthesis Report of Global Public Consultation)”는 현재 세계적으로 만연된 여러 가지 종류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차별적 양상을 서술하고 불평등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개발에 해가 될 수 있

음을 경고한다. 젠더뿐 아니라 계급, 인종, 연령, 장애, 성적취향, 종교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구조가 중층적으로 작용해 총체적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하에 사회구조 속에 만연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불평등 논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식수, 건강, 교육, 에너지, 거버넌스, 분쟁과 취약성, 인구 등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다뤄야 할 주요 주제로 부각되었다.

일례로 보건 분야에서도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승만(2013)은 “평균값의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단순히 추론하자면, MDGs 캠페인을 수행하는 지난 13년 간 (국제 및 자국 내) 보건 의료사업의 실질적 대상층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성사망률 감소를 위해 WHO에서 제안하는 11가지 핵심 지표들에 대한 소득수준별 집단에 대한 격차가 벌어졌다면, 집단 내 최저빈곤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이 주요 사업대상이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최저빈곤층은 MDGs 관련 보건사업에서도 여전히 제외되어 결국 계층 간 격차가 더 커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층위의 주변인, 즉 이등시민(secondary citizen)들은 물론, 국가 간 격차까지 불평등의 카테고리에 대거 포함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앞서 MDGs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MDGs가 성별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든 바 있다. 이런 맥락이 불평등 카테고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종족, 성적 취향 등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적인 권력관계가 여전히 공고하거나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화된 집단은 더욱 더 취약해지고 격차는 더 커지고 불평등은 강화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및 개인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불평등이 심화돼 차별, 편견, 고정관념을 낳고 빈익빈 부익부, 빈곤의 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평등은 공평(Fairness)과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시대와 세대를 걸쳐 재생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의 원인이자 결과다 (UNICEF & UN Women, 2013).

제I장

제II장

제III장

섹터

제IV장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한계를 “출생 복권(the lottery of birth)”이란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생 복권은 어떤 환경에서 출생했느냐에 따라 개인의 인생행로가 결정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UNICEF와 UN Women(2013) 조사에 따르면 32개국에서 상위 10% 가정의 자녀들이 하위 빈곤층 10% 가정의 자녀들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35배나 높다.¹⁰⁾

불평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특정 집단만을 주변화 시키고 차별하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구조적 불평등이 지속된다면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은 헛수고일 뿐이다. 국제사회의 물질 지원뿐 아니라 해당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 변화와 거버넌스가 병행되지 않는 한, 구조적 불평등의 해소는 요원할 것이다. 하지만 UN HLP 보고서는 불평등 해소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불평등 해소 문제를 단지 선언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UN Women의 세계여성발전보고서(Progress of the World's Women Report)는 개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모든 세계에서 여성과 여아들이 여전히 2등 시민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 참여, 안전 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한다(UN Women, 2012). 성 평등은 남성의 기회를 여성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모두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들의 인간적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고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그로 인한 불평등의 만연은 성 평등 달성을 요원하게 만든다.

MDGs 이후 국가 간 GDP 차이도 증가했지만 개인 간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국가 및 개인 간 소득불평등은 다른 형태의 차별, 즉,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격차를 야기한다.

10) UNICEF & UN Women (2013), *Addressing Inequalities: Synthesis Report of Global Public Consultation*, Global Thematic Consultation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WorldWeWant2015, p12.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갖는다.¹¹⁾ 흔히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도 감소할 것이라 추정하지만 실제로 경제성장과 빈곤과의 관계는 복합적일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성질과 고용집약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개도국의 경제성장은 선진국보다 노동집약적이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저임금 개도국이라 해도 소수민족의 자본집약적 생산이 집중된 곳에서는 경제성장이 빈곤감소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지 않다.

한편 UNICEF와 UN Women이 Post-MDGs에 대해 제안한 글로벌 테마별 협의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분야에서 주로 찾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분배의 불평등을, 사회적 불평등은 지위의 불평등을 지칭한다. 환경적 불평등은 자연자원 접근 면에서 불평등을, 정치적 불평등은 차별적 법과 제도로 인해 부정의가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기회와 접근 면에서 차별받는 불평등을 지칭한다 (UNICEF&UN Women, 2013 :20-30).

이렇게 중층적이고 교차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설계된 정책, 법적 조치,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하고, 개인을 프로그램의 수혜자나 목표가 아닌 권리의 담지자로 보는 등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UN HLP 보고서는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빈곤이 퇴치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 경제, 사회, 환경, 정치적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제시했으며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경제성장과 인간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나아가야할 바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불평등을 개선하기위한 구체적인 조치, 목표, 세부목표들은 내년까지 각국이 세부사항을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다.

11) 위 보고서, p18.

2. HLP 보고서의 젠더 관련 목표 분석

글로벌 테마별 협의에 참가한 젠더 연구자들은 성평등 이슈가 Post-2015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Woodroffe & Esplen, 2012). 그 첫째 이유는 세계 극빈층 인구 중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빈곤의 여성화’라는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빈곤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성의 빈곤은 많은 경우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평등에서 비롯된다.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여성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 교육기회 부족, 임금차별, 저임금일자리, 보살핌,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부족, 여성에 대한 문화적 이미지 재생산은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제한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실례로 이와 같은 남녀차별의 상징적인 증거를 성비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Amartya Sen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남아의 수가 여아의 수보다 5%이상 차이 나는 것에 대해 주목한 ‘missing women’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Sen, 1992: 587). 부모들의 ‘남아선호’로 인해 여아들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낙태되거나, 태어난 후 버려지거나, 영양실조로 인해 조기 사망하기 때문에 남녀성비가 불균형한 것임을 그는 밝혔다. 그는 이러한 성비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사례로 인도 케랄라주를 예로 들어, 교육과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여성들에게 풍부하게 열려있을 때 성비 불균형이 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국제사회가 ‘극단의 빈곤 종식’을 최우선 목표로 유지할 것이라면 반드시 그 전제조건으로 성평등을 달성해야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성평등이 Post-2015의 중심이 되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 평등이 다른 개발목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계속되는 한 여성은 개발목표 달성에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개발 목표 달성은 요원해지게 된다.

글로벌 테마별 협의 보고서는 젠더 불평등의 4가지 형태를 첫째, 사회, 경제, 정치적 자원과 기회에 대한 통제권 부족(Lower Control of Social, Economic, Political Assets and Opportunities), 둘째, 여성과 여아의 종속적 지위에 대한 문화적·사회

적 재생산(Cultural and Social Reproduction of Women's and Girl's Subordinate Status), 셋째,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확보 실패(Failures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넷째,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 꼽았다 (UNICEF&UN Women, 2013).

HLP 보고서가 제안한 12개 목표 가운데 성평등은 8개 목표와 관련된다. 성 평등은 1번 빈곤종식, 2번 여성/여아의 성평등 달성과 역량강화, 3번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제공, 4번 건강한 삶 보장, 5번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6번 식수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8번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및 형평적 성장, 11번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보장 등 8가지 목표 달성과 직, 간접적 관계를 갖는다.¹²⁾ 이 가운데 젠더와 관련된 직접 목표인 2번 소녀 및 여성 역량강화와 성평등 달성 목표를 살펴보자.

〈표 1〉 HLP의 성평등 관련 글로벌 목표와 세부목표

글로벌 목표 (Goals)	국가별 세부목표 (Targets)
2. 소녀 및 여성 역량강화와 성평등 달성 (Empower Girls and Women and Achieve Gender Equality)	2a. 소녀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방지 및 근절 ^{1,2,3}
	2b. 조혼 근절 ^{1,2}
	2c. 재산 소유 및 상속, 계약서 서명, 사업 등록 및 은행계좌 설립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보장 ^{1,2}
	2d. 정치적, 사회적, 공적 생활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 제거 ^{1,2,3}

출처 : HLP 보고서(2013), pp30-31, 임소진 (2013), pp10-11.

1 : 0% 목표를 포함한 글로벌 최저기준 적용

2 : 향후 구분이 필요한 지표

3 : 적합한 지표화를 위해 목표치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작업 필요

12) 부록에 있는 HLP보고서가 제시한 Post-MDGs 분야별 예시 목표를 참고할 것.

1)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조혼 근절

앞서 젠더 측면에서 MDGs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했을 때 여성에 대한 폭력이 MDGs에서 제외됐던 것이 큰 비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한 듯 Post-MDGs 성평등분야 예시적 목표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는 만연하고 일상적인 폭력이다. 전 세계 모든 여성 3명중 1명은 일생동안 한 번 이상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릴 확률이 있다¹³⁾는 WHO의 보고처럼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전쟁무기로서의 강간, 성기훼손, 명예범죄, 강제결혼 등이 종교, 문화, 전통 등과 결합해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다.

일례로 네팔의 차우파디(Chaupadi)는 여성이 생리기간일 때 집밖의 헛간 같은 곳에 머물게 하는 전통 관습이다. 생리대 보급이 잘 되었지 않아 생리기간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생리하는 여성을 더럽다는 시선으로 보고 집에서 쫓아내 격리시키는 가부장적인 폭력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차우파디는 전통의 이름으로 여전히 네팔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조혼(Early Marriage)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조혼은 일종의 아동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 소녀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면 집에서 가사를 돌보다 일찍 결혼하는 것이 관습인데, 이 결혼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들끼리 결혼시키는 것이다 보니 강제적이고 일방적이며 폭력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 소녀들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임신, 출산하기 때문에 출산 관련 사망률이 높고, 교육을 중단당하기 때문에 문맹이라든가 빈곤에 빠지기 쉬우며, 신체적 및 감정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장적 결혼구조에 진입하

13) WHO(2005),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WHO.

게 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를 입기 쉽다. Heath(2012)에 따르면 결혼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의 직업유무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경험 비율이 높아지다가 결혼연령이 20세를 넘어가면 직업유무에 따라 가정폭력 경험 비율이 달라진다.¹⁴⁾

조혼의 또 다른 영향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린 소녀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지난 2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국립 모자보건병원 원스톱 위기관리센터(Onestop Crisis Management Center, 이하 OCMC)를 방문한 바 있다. 이 센터는 우리나라의 원스톱지원센터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한 곳에서 치료, 상담, 법적 절차까지 마칠 수 있게 한 지원센터다. 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수집한 지난 1년간 센터를 방문한 피해자 연령 데이터에서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대가 5-9세(15%), 10-14세(25%), 15-19세(30%)로, 전체 피해자의 70% 이상이 19세 미만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¹⁵⁾

〈표 2〉 카트만두 국립 모자보건병원 OCMC 이용 피해자 연령대

연령대	성폭력 피해건수
4세이하	3
5-9세	32
10-14세	53
15-19세	64
20-24세	34
25-29세	12
30-34세	6
35세이상	3

출처: 네팔 국립모자병원 OCMC 데이터

14) Heath, Rachel(2012), Women's Access to Lab Market Opportunities, Control of Household, Resources and Domestic Viole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149*, World Bank.

15) 김양희 (2014), 네팔 무구지역 모자보건사업 출장 보고서, 16쪽, 한국국제협력단, 미간행.

제I장

제II장

제III장

섹터

제IV장

피해자들의 결혼지위는 미혼이나 과부 등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160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기혼(44건), 유아(3건) 순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19세 이전에 몰려있는 현상은 조혼 관습으로 인해 소녀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과부와 낮은 카스트인 달릿(Dalit)에 속하는 여성들을 물리적,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회문화적 관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조혼근절은 폭력으로부터의 해방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목표는 법률제정과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해당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가족법은 혼인 최저연령을 만18세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빈곤, 문화적 관습, 부모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12~19세까지 조혼이 성행하고 있다. 옛날 우리나라의 민머느리제도처럼 어린 소녀를 남편 집으로 데리고 와 클 때까지 집안일을 시키다 결혼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

조혼의 주원인은 빈곤이지만, 이를 근절시키려면 빈곤퇴치와 더불어 보편적 중등교육이 달성되어야 한다. 많은 개도국에서 여아들이 중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가사를 거들다가 조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혼 근절 목표는 보편적 중등교육 같은 교육 목표와 모성사망 감소, 아동사망 감소 같은 보건목표들과 분리불가능하다. 따라서 조혼 근절만을 세부목표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와 보건 목표에 여아들의 조혼을 막을 수 있는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가 설정되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2) 재산 소유, 정치적 참여 및 기타 논의

HLP 성평등 목표에 나타난 여성의 재산 소유와 공직 참여 등의 목표는 MDGs의 목표이기도 했으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던 것들이다. 2c 목표는 재산권, 소유권, 상속권 등 권리적 측면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목표로 볼 수 있고 2d 목표는 여성의 공직 진출, 정치적 참여, 사회적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다. 이 목표들은 성평등 달성에 중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래 지금까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사회가 여성의 경제적 개발과

역량강화에 큰 관심과 투자를 하지 않았던 점도 한 가지 이유다. 선진국의 양자기관과 다자기구들이 모성사망이나 HIV 예방 같은 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성의 재산 소유권과 정치적 참여 같은 데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젠더 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 또한 어쩔 수 없이 가부장적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OECD DAC 회원국들의 원조금액을 매년 조사하는 OECD DAC네트워크(2014)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적 능력개발 분야의 원조금액이 다른 분야의 원조에 비해 무척 적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성의 재산소유와 정치적 참여 목표들은 법과 제도적 접근을 통한 추진이 병행되어야 하며, 실제 목표 달성과정에서는 해당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아프가니스탄 민법은 여성의 재산 상속권과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관습적으로 여성은 상속대상에서 제외되며, 토지를 비롯한 재산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2d. 목표의 경우 ‘차별’¹⁶⁾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이 차별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차별 감소를 어떻게 지표화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Post-MDGs의 성평등 목표에 대한 주문과 의견 가운데에는 MDGs목표에서 배제됐던 기억을 상기시킨 듯 여성의 성 건강과 재생산권을 주요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Hill et al, 2013; Sen, 2013). 또 성평등에 관한 단독목표를 유지하고, 부문별 각 목표에 걸쳐 성인지적 목표와 지표를 동시에 추구하라는 주문이 눈에 띈다. 성평등 목표는 광범위하고 이슈에 중점을 두되, 세부목표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사람들이나 집단으로 하라는 제안(Sen, 2013)과 성평등에 관한 단독목표와 각 목표에 걸쳐 성인지적 목표와 지표를 동시 추구하라는 제안(Treussart&Piemonte, 2014) 들은 모두 MDGs에서 성평등 목표와 기타 목표들이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채 파편화됐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16) 최근에는 차별이 과거의 직접적인 차별 개념에서 벗어나 은밀하고 비가시적이며 간접적인 간접차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표로 설정하고 수치화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성평등 목표가 범분야 이슈로 반영되면서 원래의 성평등 목표가 희석되는 문제에서도 비롯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남영숙(2009, 239)은 “성 주류화 전략이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많은 경우 성 주류화 전략과 여성에 초점을 두는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런 전략의 양극화로 인해 오히려 성특정적 프로그램과 정책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¹⁷⁾ 성 평등 목표가 모든 사업에 걸쳐 적용되는 범분야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성 특정적 사업과 관련 목표가 희석되는 현상은 성주류화 전략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MDGs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밖에 Harper 등(2014)은 Post-MDGs 의제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 타파를 포함시키라고 주문한다. 이들은 여성들이 개발 목표에 전면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는 사회규범을 타파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쳐 진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변혁적인 지표를 설정하라고 담대하게 주장한다.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규범은 남아선호, 교육과 보건 분야의 불평등한 접근, 조혼, 폭력, 상속 및 재산소유 차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차별적인 사회규범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젠더관련 데이터 수집과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을 타파하기위한 6가지 지표로 첫째, 여성의 성 건강과 재생산권, 둘째, 여성에 대한 폭력, 셋째, 토지 및 재산소유, 넷째, 정치참여, 다섯째, 여성과 남성의 동등가치, 여섯째, 여성과 남성의 무보수 보살핌 노동 분배 등을 들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가치는 사회적으로 여아와 남아에게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지 파악하기위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지표로 성비(Sex Ratio), 교육 분야 남아 선호 등을 들었다. 여성과 남성의 무보수 보살핌 노동 분배는 남녀가 가사 일에 투입하는 평균 시간, 임금노동과 무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남녀 비율 등을 구체적인 지표로 들었다.¹⁸⁾

17) 이 같은 경향은 코이카의 성주류화 전략에서도 나타나는데, 성평등을 직접 목표로 한 사업인 젠더마커 2점 사업과, 일반사업을 통해 여성의 수혜를 강화하는 사업인 젠더마커 1점 사업 가운데 후자의 사업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진다. 일례로, 보건, 교육,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 핵심사업 분야에서 여성이 간접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이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관련 사업의 비중은 낮다.

18) Harper, Caroline, Keiko Nowacka, Hanna Alder, Gaëlle Ferrant (2014), Measuring Women's Empowerment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Post-2015 Agenda, ODI, OECD dev.

그러나 여성억압적인 사회규범 타파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들은 타 목표들의 지표와 차별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또 구체적인 지표를 달성한다 해도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규범이 바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표 달성이 규범 타파를 동반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한편 성평등 달성 목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성 일자리 문제도 반드시 세부목표에 포함되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된다. 선진국도 물론이지만 개도국에서 특히 여성들은 사적 영역에서 비가시적인 무임금노동을 수행하느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역량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 노동, 일자리’ 목표에서 여성 실업률 감소, 여성 직업훈련 등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보건, 교육, 식량안보, 평화, 거버넌스의 목표들도 모두 여성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도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V. 나가며

지금까지 젠더측면에서 MDGs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UN 고위급패널 보고서와 UN 작업반 보고서 및 기타 논의들을 배경으로 Post-MDGs 젠더관련 목표를 분석해 보았다.

MDGs는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중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간과했고, 성 건강과 재생산권에 침묵했고, 목표들 간의 탈구와 파편화로 인해 젠더적 측면이 비가시화된 측면을 배제할 수 없으며, 여성을 개발목표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위치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MDGs를 추진해온 지난 10여 년간 국가 간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계급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소득 불균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 Post-2015를 준비하는 국제사회는 불평등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불평등은 해당사회에서 주변화된 사람들을 더욱 더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억압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게 교차적이고 중첩적인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들이 더욱더 빈곤해지는 아이러니

제I장

제II장

제III장

섹터

제IV장

가 발생한다. 불평등은 성별, 종족, 인종, 학력, 연령, 종교, 성적 취향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Post-MDGs를 준비하는 학계, NGO,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불평등의 해소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더 필요하다.

UN HLP 역시 불평등에 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종합보고서를 냈지만 불평등에 관한 단독목표와 구체적인 세부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글로벌 테마별 협의 보고서에서도 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holistic)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면서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구조적으로 만연한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감소에 관한 글로벌 목표와 세부목표가 단독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목표와 세부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각 국가들이 이의 달성을 위한 제도, 정책, 사업을 수립할 기반을 갖기 어렵다.

HLP가 제시한 성평등 관련 목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근절, 조혼 근절, 여성의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참여 등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 목표는 유지하면서 각 분야별 목표에서 성인지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수행하라는 의견과, 사회규범 타파를 Post-MDGs의제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용 및 일자리 목표에서 포괄적 경제성장과 포용적 인간개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목표인 여성의 고용과 경제활동에 관한 목표가 제외됐는데,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여성 고용문제를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 고용과 여성 경제활동도 측정 가능한 목표치와 지표로 제시하고 세부목표에 포함시켜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표 1〉 Post-2015 HLP 보고서의 예시적 글로벌 목표와 세부목표

글로벌 목표 (Goals)	국가별 세부목표 (Targets)
1. 빈곤 종식 (End Poverty)	1a. 1일 소득 1.25 달러 미만 인구 근절과 2015년 기준 국가빈곤선 미만 생활자 비율 x% 감소 ^{1,2}
	1b. 토지, 재산 및 그 외 재산에 대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여성과 남성, 커뮤니티, 사업의 비율 x% 증가 ^{2,3}
	1c.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취약층 및 빈곤층 x% 보호 ^{2,3}
	1d. 회복가능성 구축과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률 x% 감소 ²
2. 소녀 및 여성 역량강화와 성평등 달성 (Empower Girls and Women and Achieve Gender Equality)	2a. 소녀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방지 및 근절 ^{1,2,3}
	2b. 미성년 결혼 근절 ^{1,2}
	2c. 재산 소유 및 상속, 계약서 서명, 사업 등록 및 은행계좌 설립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보장 ^{1,2}
	2d. 정치적, 사회적, 공적 생활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 제거 ^{1,2,3}
3.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 제공 (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3a. 유아교육 접근 및 완료가 가능한 아동비율 x% 증가 ²
	3b. 모든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교육수준에 준하는 읽고, 쓰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등교육 완료 보장 ^{1,2}
	3c. 모든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의 초급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소년의 인정되고 측정가능한 학습 성과 비율 x% 증가 ^{1,2}
	3d.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 및 직업기술을 갖춘 청년층 및 성인 남녀의 비율 x% 증가 ^{2,3}
4. 건강한 삶 (Ensure Healthy Lives)	4a. 예방가능한 영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근절 ^{1,2}
	4b. 아동, 청소년, 위험 환경 노출 성인, 고령층의 모든 예방접종 비율 x% 증가 ^{1,2}
	4c. 산모사망 비율 10만 명 당 x명으로 감소 ^{1,2}
	4d. 보편적 성보건 및 모자보건과 권리 보장 ^{1,2}
	4e. HIV/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 열대 질환, 주요 비전염성 질환 등의 질병으로 인한 부담감소 ²
5. 식량안보와 영양 (Ensure Food Security and Good Nutrition)	5a. 모든 인구의 기아퇴치와 충분하고, 안전하며, 수용가능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권 보호 ^{1,2}

제I장

제II장

제III장

섹터

제IV장

글로벌 목표 (Goals)	국가별 세부목표 (Targets)
	5b. 모든 5세 미만 아동의 성장저해요소(stunting) x%, 신장 대비 저체중(wasting) y%, 빈혈 z% 감소 ^{1,2}
	5c. 소작농 수익률의 지속가능한 증가와 농지관개(irrigation) 이용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성 x% 증가 ³
	5d. 지속가능한 농업, 해양, 담수어업 관행의 수용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의 지정 어류비축 재구축 ¹
	5e. 수확 후 손실 및 음식물 쓰레기 x% 감소 ³
6. 물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달성 (Achieve Universal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6a. 가정, 학교, 보건센터, 난민캠프에서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제공 ^{1,2}
	6b. 노상배변(open defecation) 근절과 학교 및 직장에서의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그리고 가정에서의 위생에 대한 접근성 x% 증가 ^{1,2}
	6c. 공급에 맞는 담수회수 제공과 농업관련 물 효율성 x%, 산업관련 물 효율성 y%, 도시지역 물 효율성 z% 증가
	6d. 모든 지방 및 산업 폐수 재활용 또는 방출 전 사전처리 ^{1,3}
7.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Secure Sustainable Energy)	7a.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비율 두 배 증가
	7b. 현대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1,2}
	7c. 건물, 산업, 농업, 교통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 두 배 증가
	7d. 낭비성 소비를 촉진시키는 비효율적 유가보조금 단계적 폐지 ^{1,3}
8.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공평한 성장 (Create Jobs, Sustainable Livelihoods, and Equitable Growth)	8a. 일자리다운 일자리 및 생계 수 x 증가 ²
	8b. 교육, 취업,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비율 x% 감소 ²
	8c. 교통 및 ICT와 같은 금융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제공에 의한 생산적 역량 강화 ^{1,2,3}
	8d.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 및 기업가 촉진을 통한 새로운 상품으로 부터의 부가가치 Y와 새로운 시작 x 증가 ^{2,3}
9.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Manage Natural Resource Assets Sustainably)	9a. 모든 정부 및 주요 기업의 경제·사회·환경적 회계장부 공개 ¹
	9b. 정부 조달의 지속가능성 고려 x% 증가 ³
	9c. 생태계, 종(species),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보호장치(safeguard) 마련
	9d. 삼림파괴 x% 감소와 재식림(reforestation) y% 증가

글로벌 목표 (Goals)	국가별 세부목표 (Targets)
	9e. 토양품질 향상, x톤의 토양 침식 감소, 사막화 방지
10. 굿거버넌스와 효과적 제도 확보 (Ensure Good Governance and Effective Institutions)	10a. 출생신고와 같은 자유롭고 보편적인 법적 신분 제공 ^{1,2}
	10b. 언론, 집회,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와 독립적 매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1,3}
	10c. 모든 단계에서 정치적 과정의 대중적 참여와 시민참여 증가 ^{2,3}
	10d. 정보에 대한 대중권리와 정부 데이터 이용 보증(guarantee) ¹
	10e. 뇌물수수 및 부패 감소와 공무원의 책무 보장 ³
11.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보장 (Ensure Stable and Peaceful Societies)	11a. 외인사(violent death)의 10만 명 당 x명으로 감소와 모든 종류의 아동학대 근절 ^{1,2,3}
	11b. 법적기관(justice institutions)의 접근성, 독립성, 행정력(well-resourced) 보장과 정당한 절차를 위한 권리 존중 ^{1,2,3}
	11c. 조직적 범죄 등을 포함한, 분쟁을 야기하는 외부 스트레스 요인 제거 ³
	11d. 안보를 위한 군대, 경찰, 사법부의 역량, 전문성, 책무성 강화 ³
12. 글로벌 차원의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장기적 자원 촉진 (Create a Global Enabling Environment and Catalyse Long-Term Finance)	12a. 투명하고 공정하며 개발에 우호적인 무역 시스템 지원 ³
	12b.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개인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개혁 이행 ³
	12c.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글로벌 평균 기온 증가를 산업화 이전 단계 이상인 2oC 이하로 유지
	12d. 공여국의 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 GNP 대비 0.7% 목표화,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 GNP 대비 0.15%에서 0.20%로 목표화, 그리고 그 외 국가들의 보완적 재정지원의 자발적 목표화
	12e. 불법자금흐름(illicit flows) 및 탈세 감소와 은닉자산(stolen-asset) 회복 x3 달러 증가 ³
	12f. 과학, 기술, 혁신, 개발 데이터에 대한 협력 및 접근성 촉진 ³

출처 : HLP report(2013), pp30-31, 임소진 (2013), pp10-11.

1 : 0% 목표를 포함한 글로벌 최저기준 적용 (Candidates for global minimum standards, including 'zero' goals)

2 : 향후 구분이 필요한 지표 (Indicators to be disaggregated)

3 : 적합한 지표화를 위해 목표치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작업 필요 (Targets require further technical work to find appropriate indicators)

제I장

제II장

제III장

섹터

제IV장

참고문헌

- 김양희 (2013),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 『젠더분야 이슈리포트』 2013년 2호, 한국국제협력단, 미간행.
- ____ (2014), 네팔 무구지역 모자보건사업 출장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미간행.
- 남영숙 (2009), “개발원조기구의 성 주류화 정책 경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학논집』, 26:2, p223-255.
- 이유진(2013), 『Post-2015 개관 및 주요 논의 트랙』, 2013년 7월호, 한국국제협력단, 미간행.
- 임소진 (2013),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고위급패널 보고서,” 『정책과 이슈』 10호.
- 차승만 (2013), “보건분야 Post-2015 논의동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국제협력단, 미간행.
- Harper, Caroline, Keiko Nowacka, et al. (2014), Measuring women's empowerment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Post-2015 agenda, ODI, OECD dev.
- Heath, Rachel (2012), Women's Access to Lab Market Opportunities, Control of Household, Resources and Domestic Viole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149, World Bank.
- Hikaumba, Leonard, President of Zambia(2012), "Socioeconomic 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Decent Work," ILO · IMF · Government & Stakeholders Conference, 21 May 2012.
- Hill, Peter S, Dale Huntington, Rebecca Dodd et al. (2013), “From MDGs goals to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an evolving aid environment,” *Reproductive Health Matters*, 21(42): 113-124.

- Jewkes, Rachel, et al.(2013), “Prevalence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non-partner rape perpetration: findings from the UN Multi-country Cross-sectional Study on Men and Violence in Asia and the Pacific,” *Lancet*, September 10, 2013, e1-e11.
- Sen, Amarty (1992), “Missing Women,” *British Medical Journal*, 304(6827): 587-588.
- Sen, Gita (2013), “Gender Equality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Lessons from the MDGs,” *IDS Bulletin*, Vol. 44 No. 5-6, pp42-48.
- Sustainable Solutions Network (2013), *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Overcoming the constraints*, Background paper for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 May 2013.
- Thomson, Marilyn (2012), *Integrating Gender-based Violence: The Post-2015 agenda*, The Irish Consortium on Gender-based Violence.
- Treussart, Teresita Kelly Lopez& Cecilia Piemonte, (2014) Financing the unfinished business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Priorities for the Post-2015 framework-Technical Brief, OECD CAD Network on Gender Equality.
- UN (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UN HLP report.
- UNICEF & UN Women (2013), Addressing Inequalities: Synthesis Report of Global Public Consultation, Global Thematic Consultation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WorldWeWant2015.
- UN System Task Team (2012),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UN.
- Unterhalter, Ealine&Andrew Dorward (2013), “New MDGs, Development Concepts, Principles and Challenges in a Post-2015 World,” *soc Indic Res*, 113: 609-625.

제I장

제II장

제III장

섹터

제IV장

- WHO(2004), "Violence against Women and HIV/AIDS: Critical Intersections: Sexual Violence in conflict Settings and the Risk of HIV," *WHO Information Bulletin Series*, Number 2.
- ____ (2005),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Summary Report*.
- WHO et al. (2013),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on-partner Sexual Violence*.
- Woodroffe, Jessica&Emily Espen (2012), "Gender equality and the Post-2015 framework," *Gender&Development Network, Briefings 3*, July, 2012.